

# G-Welfare Weekly Report

## 01

### 중앙정부 정책동향

#### 1.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 - 공동공간에 CCTV설치 등

##### 01 주요 내용

-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남원에서 발생하였던 사회복지사의 장애인 폭행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을 마련(6.30.)

##### 인권침해 예방체계 강화

- 장애인 거주시설 내 CCTV 설치 추진 : 공동공간에 우선적으로 설치('16년 하반기)
- 시설장 및 종사자에 대한 관리 강화
  - (교육 강화) 인권교육 이수 의무 준수하지 않는 시설장에 대한 불이익 처분 근거 마련 등
  - (취업 제한) 장애인 학대 범죄자에 대한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규정 신설 추진
- 인권보호 취약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컨설팅 및 점검 강화
  - 인권침해 발생 문제 시설 대상 보건복지부 담당 직원을 지정, 인권지킴이단\* 활동에 참여
  - 장애인 학대 등 인권침해 발생 시설에 대한 이력 관리 및 현황 공개
- 인권침해 조사 특별전담팀\* 구성단위를 기존 시도에서 시군구까지 확대 운영
  - \* 지자체, 경찰,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시군구 단위 : 3~5명)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대상 직군 확대,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 추가, 위반자 벌칙규정 마련
  -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 복지전담 공무원,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의료인, 구급대원, 교육 기관 종사자 등 21개 직군
  - 금지행위에 성범죄, 정서적 학대 등 추가

##### 피해자 조기 발견 및 구조 효과성 제고

- 인권침해 전력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인권실태조사 실시 추진
- 사건 발생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수사기관은 상호 동행요청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사후보호체계 구축

- (쉼터 확대)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설치를 모든 광역지자체로 확대
- (보호조치)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이 발견된 지자체에 피해 장애인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 부여
- (인프라 확충) 시설 폐쇄 등으로 피해 장애인 보호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침해 문제 발생지역 인프라 확충 우선 지원

- 또한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의무기관이 확대됨\*\*
  - 국가·지자체에서만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이상 실시,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

##### 02 경기도 시사점

-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거주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광범위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시설 거주 장애인의 인권보호강화를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단계적인 접근 필요
  - 장애인 입장에서 서비스 원조 및 지원, 학대 방지 등 권리침해를 예방하고 권리행사를 옹호할 수 있는 권리보호 및 옹호 시스템(Protection & Advocacy)의 조기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 구축
  -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시군 인권지킴이단,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도내 인권관련 수행기관의 통합 연계망 구축

\* 시설 내 거주 장애인 인권상황 점검을 위하여 종사자, 보호자, 인권전문가로 구성(5~11인), 분기별 1회, 연 4회 이상 운영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 ('16.6.30 시행)

## 2. 공공실버주택 “따복실버하우스” 로 확대

### 01 주요 내용

- 국토교통부는 ‘공공실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하여 7월 5일부터 9월 12일까지 지자체 공모를 거쳐 대상 사업지를 10개소(1천여 호)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
  - 공공실버주택은 올해 처음 도입하여 1월에 대상지 11곳(1,234호)을 선정하여 추진 중
  - 경기도는 지난 1차에서 성남위례(164호), 성남목련(130호), 수원광교(150호)를 추진 중이며, 건설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전환한 성남위례와 성남목련은 연내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지자체 등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하도록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대상지를 제안 받아 선정할 계획
  - 이번에 선정되는 사업지는 '17년 사업승인을 거쳐 '18년말~19년 입주가 가능하며, 9월말 사업 가능성과 입지여건, 복지관 운영계획 등을 평가하여 10곳을 선정
  - 공공실버주택으로 선정되면 정부재정으로 영구임대주택 기준의 주택건설비('16년 기준 호당 7,431만 원)와 기부금(SK, LH)을 활용한 복지관 건설비 등으로 개소 당 40억 원, 복지관 운영비로 초기 5년간 연 2억 5천만 원이 추가로 지원

(주택) 높낮이 조절 세면대, 안전손잡이, 비상콜 등이 설치되어 고령자의 안전과 편리성 제고 (복지관) 건강관리·생활지원 및 문화활동이 가능한 공간 및 시설을 설치하고 프로그램 운영  
- 실버복지관은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



- 주택공급에만 중점을 둔 기존 방식과 달리 공공실버주택은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결합하여, 수요자에게 맞춤형으로 공급하는 새로운 주거복지모델임

### 02 경기도에의 시사점

- 따복기숙사, BABY 2+따복하우스에 이어 “따복실버하우스” 로 경기도형 공공실버주택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필요
  - 공공실버주택의 입주자격은 65세 이상 저소득(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등) 고령자에게 공급하되, 국가유공자, 독거노인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되어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 중 보증금(위례신도시 보증금 241만원~1천836만원)을 감당할 목돈이 없는 저소득 노인에게 보증금을 지원하는 방식 등을 개발하여 따복실버하우스로 공급
- 경기도형 공공서비스디자인 개념을 적용하여 수요자 맞춤형 따복실버하우스로 개발
  - 현재 공공실버주택의 개념은 일본의 “실버하우징 프로젝트” 의 개념을 따온 것으로,
  - 경기도의 따복실버하우스는 우리나라 노인의 요구와 선호에 맞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공서비스디자인\*\* 개념의 접근이 필요

\* 지난 4.28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등에 따라 고령자를 위한 복지서비스가 연계된 공공임대주택

\*\*공공서비스디자인의 대표 사례인 영국의 I-Design 프로젝트는 노년층이 사용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자인 노년층에 맞춰 육체적, 심리적인 사항을 복합적으로 연구 적용한 프로젝트

02

# 사도/사군 복지정책 동향 분석

## 1. 경기도 31개 시군별 성인지 예산 비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된 후 두 번째 맞는\* 양성평등주간(7. 1.~7. 7.)으로 31개 시군의 성인지 예산(gender sensitive budget) 현황을 비교 분석

- 성인지 예산은 예산이 양성 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분배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는 일련의 활동
  - 우리나라는 '13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지방의 성인지 예산은 총 사업 수 12,805개 · 총 예산액 약 146조원 수준('14년 기준)
  - 기능별로는 사회복지분야가 전체 사업 중 42.3% · 전체 예산액 중 78.9%로 가장 높은 비중

〈표 1〉 성인지 예산의 구성

여성정책추진사업 (필수)	-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여성능력개발교육 ·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등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필수)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 평가 받는 사업 - 정보화교육 · 지역정보화 촉진 ·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권장)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 성 불평등 혹은 성 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등

- 올해 경기도 성인지 예산은 총 1조2,506억 원이며, 도내 시군의 성인지 예산 규모는 수원 · 고양 · 용인 순으로 나타남\*
  - 31개 시군의 성인지 예산 규모는 수원 · 고양 · 용인 순이며, 대상사업별로 사업 수는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63.4%)이, 예산액은 여성정책추진사업(50.2%)의 비중이 가장 높음
  - 대부분 지역에서 필수사업 비중이 권장사업(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보다 높고, 시흥 · 파주 · 광주 · 여주의 경우 필수사업 비중이 권장사업보다 낮음

〈표 2〉 경기도 시군별 성인지 예산 현황(2016년 본예산 기준)

지 역	사업 수	예산액	지 역	사업 수	예산액	지 역	사업 수	예산액
경 기	164	1,450,655	시 흥	61	68,613	포 천	32	20,263
수 원	138	339,093	화 성	105	104,109	오 산	58	35,391
성 남	165	105,107	광 명	50	14,770	하 남	66	38,446
고 양	92	190,775	파 주	57	30,301	의 왕	50	41,116
부 천	70	65,180	군 포	78	19,624	여 주	89	60,862
용 인	113	174,537	광 주	69	26,524	동두천	69	8,443
안 산	110	40,902	김 포	61	135,737	양 평	59	14,649
안 양	79	43,895	이 천	68	75,386	과 천	38	6,959
남양주	68	52,474	구 리	47	14,922	가 평	55	21,518
의정부	73	72,686	양 주	48	34,600	연 천	50	12,463
평택	104	102,098	안 성	45	30,847			

- 지방정부는 '13년부터 제도를 시행 중이나, 아직까지 부서 간 협조체계가 미비하고 제도 및 성인지적 관점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부족
  - 부서 간 협조체계 미비, 불명확한 대상사업 선정기준, 예산담당자들의 부정적 평가, 이해관계 자의 관심 부족 등이 성인지 예산 수립의 어려움으로 작용
  - 지방에서의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주로 대상사업 선정기준 체계화, 사업유형에 맞는 성과지표 개발,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확대를 통한 교육 · 컨설팅 강화 등이 필요

## 2. 재단 주요사업 안내

사업명	주요내용
2016 지역사회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 모 : 6. 13. ~ 7. 12.(30일 간) ※ 시상식 : 8. 9.(화)</li> <li>• 주 제 : 경기도 내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사회서비스 사업 아이디어</li> <li>• 대 상 : 사회서비스에 관심 있는 누구나</li> <li>• 문 의 :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267-9375)</li> </ul>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 여성주간이라는 명칭도 변경됨

\*출처: 2016 재정공시 (각 시군)

(단위 개, 백만 원)

# 03 FACT CHE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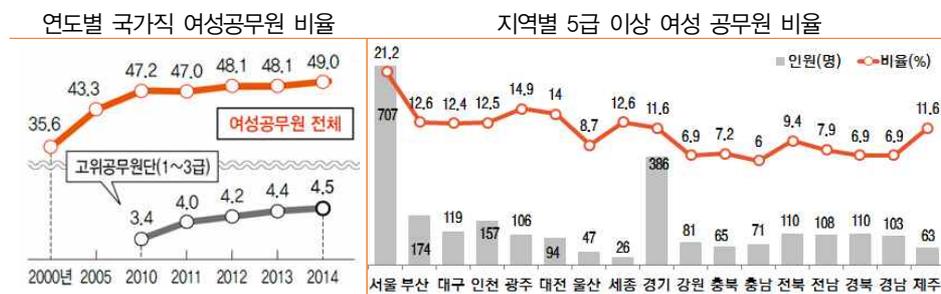
## 한국 여성의 지위는 실제 몇 위?

- 2015년 유엔개발계획(UNDP)의 성불평등지수와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지수에서 한국은 각각 23위와 115위라는 극과 극의 순위를 기록
  - ‘한국은 여성에 대한 불평등이 현저하게 개선되어 이제는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 나타나는 단계’ 라는 주장과 ‘한국 여성의 지위가 점차 악화되고 있다’ 는 상반된 주장의 근거가 됨
- 두 지수에서의 순위 차이는 여성의 지위를 측정하는 지표구성의 차이에서 비롯됨
  - 성불평등지수는 모성 사망비, 청소년 출산율, 국회의석 중 여성의원 성비, 중등교육 이상 교육을 받은 인구비율, 경제활동참가율 총 5개의 지표를 통해 측정하며,
  - 세계경제포럼의 성격차지수는 여성의 경제참여와 기회, 교육성취도, 건강과 생존, 정치권한 등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는 지표를 통해 순위화함
- 성격차지수는 개발 정도와 상관없이 남녀 간의 수치상의 ‘격차’ 만을 보여준다는 약점도 있지만 한 사회의 남녀 간 격차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성격차지수는 남성과 여성이 똑같이 불행하면 격차가 발생하지 않으며, 예로 중국의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절대적으로 낮음에도 남녀 간 차이가 없어 교육 부문에서 1위를 차지
  - 우리나라의 출생성비, 임금 격차 등에 잘못된 데이터를 사용했다는 지적도 존재하나, 특히 점수가 낮은 정치영역의 내각참여 여성비율과 행정·관리직 성비 부분은 다른 지수의 결과와 동일
- 국제기구의 통계수치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실적 개선
  - 국회의원 비율, 고위 공무원 등 의사결정과 관련한 영역에서 실질적으로 남녀 간 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법과 제도적 노력이 필요

자료 : 경향신문  
6.4.일자.

# 04 통계로 보는 복지

## 여성공무원 30만 시대, 공직사회의 유리천장



자료 : 인사혁신처, 2015년 통계연보

- 2014년 기준, 국가직 여성공무원은 31만860명으로 전체의 49%를 차지
  - 1~3급 고위공무원의 여성 비율은 2010년 50명(3.4%)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2014년에는 67명(4.5%)으로 여전히 5% 미만임
- 지방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은 평균 32.5%,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11.6%으로,
  - 5급 이상 여성 공무원의 지역별 비율은 서울이 21.2%로 가장 높고, 충남이 6%로 가장 낮음
- 경기도는 최근 인사를 통해 2급, 3급 공무원에 각 한 명씩 여성 공무원을 승진 발령하여 총 5명이 재직

# 05 해외동향

## 세계 여성의 날 제정 배경 및 현황

7월1일부터 7월7일까지는 범국민적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한 양성평등주간으로, 관련 기념일인 여성의 날(3.8.)의 제정 배경 및 현황에 대해 살펴봄

- 1908년 미국의 여성노동자들의 시위를 시발점으로 1975년부터 유엔에 의하여 매년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
  - 108년 전인 1908년 2월28일, 미국의 여성 섬유노동자 2만여 명이 뉴욕 거리에서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웠던 여성들의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이를 계기로 1909년 2월 28일을 첫 번째 전국 여성의 날로 선포
  - 1910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국제사회주의자대회에서 국제적인 성격을 띤 ‘여성의 날’ 을 지정하는 안이 17개국에서 모인 100여명의 여성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만장일치로 결의,
  - 정치적 행사로 시작된 세계 여성의 날은 주로 구소련과 옛 사회주의 국가들의 문화와 융합됨
  - 이듬해인 1911년 3월 19일 100만이 넘는 남성과 여성들이 오스트리아, 덴마크, 독일, 스위스에서 여성의 참정권과 노동권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임
  - 이들의 행동은 여성을 위한 운동에 그치지 않았고 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여성의 날’ 이 반전운동의 기폭제가 되었으며, 그 외 다른 사회 인권운동들과도 연대
  - 여성의 날이 지금과 같은 3월8일로 공식 결정된 것은 1975년부터 UN은 그 해를 ‘세계 여성의 해’ 로 지정하였으며, 첫 세계여성회의를 멕시코시티에서 개최, 1977년 12월 UN 총회는 여성의 권리와 국제 평화를 위한 UN의 날을 지정하는 결의안을 채택
- 세계여성의 날은 유엔에서 해마다 다른 주제를 마련하며 2016년 주제는 ‘2030년까지 50대 50의 지구를 만들자: 양성평등을 위한 도약’
  - 많은 국가에서 여성이 날의 정치적 색채가 퇴색되었으나 UN에서는 정치적 주제 혹은 인권 관련 주제를 지속적으로 선정해 오고 있음
  - 2016년 반기문 UN사무총장은 여성의 날 연설을 통해 “지금까지 수많은 유리천장을 깨서 그 조각이 웅단처럼 쌓이게 됐다. 이제 그 조각과 과거의 편견을 쓸어내야 여성들이 새로운 한계를 넘어 전진할 수 있다.” 라고 발표
  - 2016년 훔질레 몰람보-응쿠카 유엔여성기구(UN Women) 사무총장은 여성의 날 연설에서 “2030년까지 50대 50의 지구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여성들의 참여와 여성운동의 강화, 그리고 남성들과 함께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라고 언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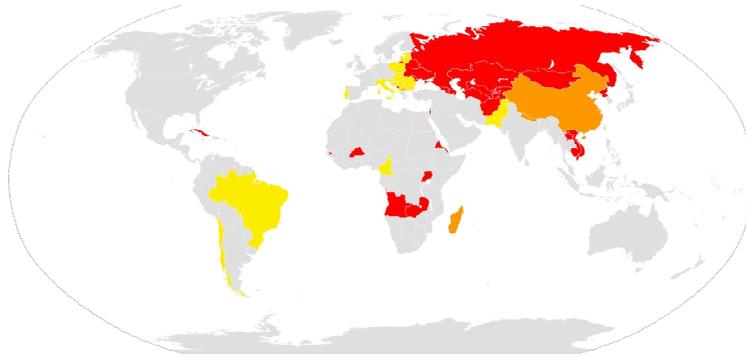
〈UN이 마련한 여성의 날 주제(1996-2015)〉

연도	UN이 정한 주제	연도	UN이 정한 주제
1996	과거를 기념하고 미래를 설계하자	2006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여성
1997	여성과 평화협정테이블	2007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 사면 종식
1998	여성과 인권	2008	여성과 여아에 대한 투자
1999	여성에 대한 폭력이 없는 사회	2009	여성에 대한 폭력 종식을 위한 여성과 남성의 연대
2000	평화를 위해 연대하는 여성	2010	동등한 권리, 동등한 기회: 모두를 위한 진보
2001	여성과 평화: 분쟁 관리 여성	2011	교육훈련과 과학기술에 대한 동등한 접근이 여성에게 좋은 일자리를 주는 길
2002	아프간 여성의 오늘 : 현실과 기회	2012	농촌여성의 권한 강화와 빈곤·기아 근절
2003	성평등과 새천년개발목표	2013	약속은 약속 : 여성폭력 추방을 위해 행동해야 할 때
2004	여성과 HIV/AIDS	2014	성평등은 모두를 위한 진보
2005	성 평등 : 더욱 안전한 미래 만들기	2015	여성 권한 부여는 인류 권한 부여: 그려내라!

- 여성의 날을 공휴일 또는 여성에게만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는 국가
  - 여성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는 국가: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벨라루스, 캄보디아, 쿠바, 카자흐스탄, 라오스, 몽골, 러시아, 우간다,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잠비아 등
  - 여성의 날을 여성에게만 휴일로 지정하고 있는 국가: 중국, 마케도니아, 마다가스카, 네팔
  - 공휴일은 아니지만 여성의 날을 널리 지키고 기념하는 국가: 카메룬,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불가리아, 칠레 등

\*옛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우 여성의 날은 국가 지정 공휴일

〈전 세계 여성의 날 제정 현황〉



■ 공휴일 지정 ■ 여성에게만 휴일 ■ 공휴일 미지정

- 매년 여성의 날이면 발표되는 유리천장 지수(The Glass Ceiling Index)
  - ‘유리천장’은 여성이나 소수민족 출신 등이 상위 관리직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는 무형의 장벽을 일컫는 용어로,
  - 영국의 경제주간 이코노미스트는 매년 3월 8일 여성의 날에 유리천장 지수(OECD 국가 중 일하는 여성에게 가장 좋은 나라와 가장 나쁜 나라)를 발표
  - 각 나라별 고등교육 격차, 경제활동 참여 비율, 임금 격차, 보육 비용, 고위직 여성 비율, 의회 내 여성 비율, 남녀 육아휴직 비율 등의 지표들을 종합해 유리천장 지수를 산출
  - 2016년에는 아이슬란드(83.6점), 노르웨이(79.3점), 스웨덴(79점), 핀란드(73.8점), 헝가리(70.4점)가 1위-5위를 차지, 일본(28.8점)은 27위, 터키(27.2점)는 28위, 한국(25점)은 OECD 29개국(평균 56점)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
- 전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여성의 날을 기념
  - 여성의 날에는 보통 남성들이 친구, 엄마, 아내, 딸 또는 동료에 꽃과 작은 선물을 하는 것이 일반적,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와 같은 몇몇 나라에서 여성의 날은 어머니의 날과 동일하게 기념하고 있어 자식들은 엄마와 할머니에 작은 선물을 전달
  - 대만에서는 해마다 여성의 날에 여성의 허리 사이즈에 대한 정부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이는 체중 증가가 여성의 건강에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음
  - 자선모금 행사, 건강달리기 대회, 콘서트, 연주회, 미술전, 사진전, 강연 및 토론회, 취업 박람회, 거리행진, 게임 등 나라별·지역별로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며 초기 여성 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아직도 남아 있는 정치적 불평등과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환기를 촉구하는 날이자 여성들의 연대를 공고히 하는 날

〈2016년 전 세계 여성의 날 모습〉

- \*스코틀랜드의 신문사 The Scotsman에서는 여성의 날을 맞아 신문의 이름을 ‘The Scotswoman’으로 변경하여 특집호를 발간, 여성의 사회, 경제, 문화, 정치적 업적을 게재
- \*스페인 발렌시아 시에서는 신호등 속 그림을 남성이 아닌 치마를 입은 여성으로 바꾸면서 신호등을 여성화하여 여성의 날을 기념
- \*필리핀의 한 여성 단체는 여성의 대통령 선거 출마의 길을 열어 준 법원의 결정을 환영
- \*대만에서는 여성의 날을 맞아 위안부 기념관 헌판식을 거행했고 위안부 할머니는 일본군 위안부에 강제 동원되었던 자신의 고난을 회고
- \*방글라데시의 의복공장 노동자들은 동일 임금,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및 안전한 작업환경을 요구